

한국 고등교육투자의 특성: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안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예연구위원

I 연구 배경 및 목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등교육 이수는 크레덴셜 취득을 위한 것이다.

경제가 발전해도 경제 발전에 비례하여 공급이 증가하지 않는 재화가 있다. 좋은 자연 환경이나 골동품(혹은 대가의 그림) 등은 물리적으로 공급이 증가하지 않는 것이며, 고위 직무와 리더의 자리 등은 사회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재화를 Hirsch(1976)는 '지위재'라고 명명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관찮은 직업이 사회적 희소성 때문에 중요한 지위재로 부상하였다(Bills,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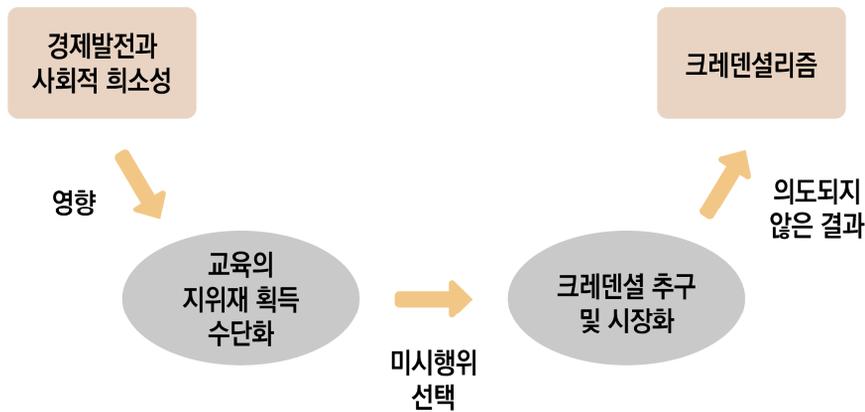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관찮은 직업이라는 지위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일찍이 베버는 고등교육 이수를 사회적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지위 교환을 촉진하는 신용으로 파악하였다. Hirsch(1976: 76-78)도 지위재의 획득을 위해 고등교육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지적하였다. 지위재 획득을 목표로 취득한 고등교육 이수증은 Brown(2001)이 파악한 것처럼 크레덴셜이다.

개인들이 고등교육을 지위재 획득의 수단으로 삼게 되면 고등교육을 이수했다는 꼬리표(크레덴셜)를 찾게 되고 교육기관이 산업적으로 크레덴셜을 생산하고 개인이 이를 구매하는 구조가 굳어지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크레덴셜리즘'이라 할 수 있고,

이 글은 유명한 외(2023), 『OECD 교육성과 지표(INES LSO) 네트워크 사업(2023)』의 연구의 일부로 작성된 원고임.

크레덴셜리즘 사회에서는 교육이라는 공공재가 완전히 자본주의적 시장 관계로 포섭되며 의도하지 않은 각종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크레덴셜리즘의 구조와 논리는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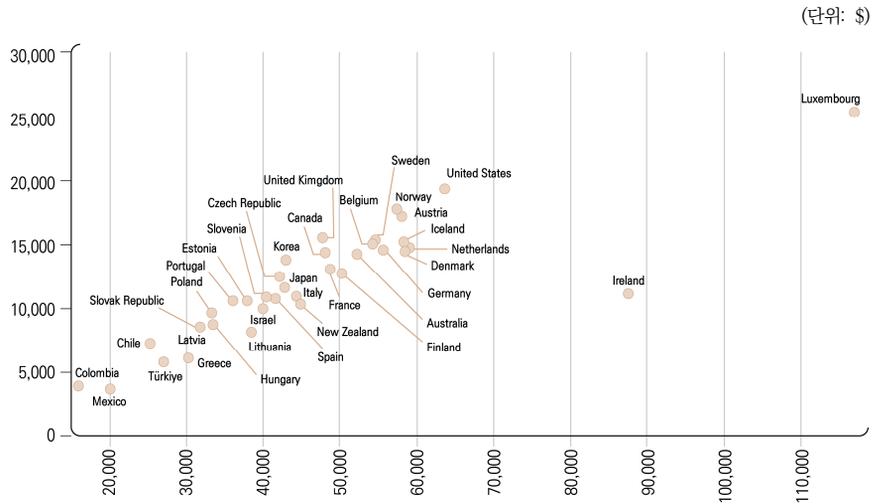
그림 1. 크레덴셜리즘의 구조와 논리



주지하듯이 한국 사회는 유달리 교육열이 강해 교육에 대한 가치 부여가 높다. [그림 2]를 보면 유사한 소득 수준의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교육에 대한 비용 지출이 특히 높은 사회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고등교육이 지위재 획득의 수단 역할을 함으로써 학벌 및 학력 추구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렇게 만성적으로 굳어진 교육 문제는 이제 누구도 해결책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이 크레덴셜화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간단히 살피고 고등교육 이수가 공적 자원이 아닌 개인 가구의 선택 및 그 가용 자원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분석하며,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이 경제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 고착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 각국의 국민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주: 횡축은 1인당 GDP의 로그값, 종축은 1인당 교육 비용의 로그값임.
 자료: OECD(2022). p. 259.

II 고등교육의 팽창과 사적 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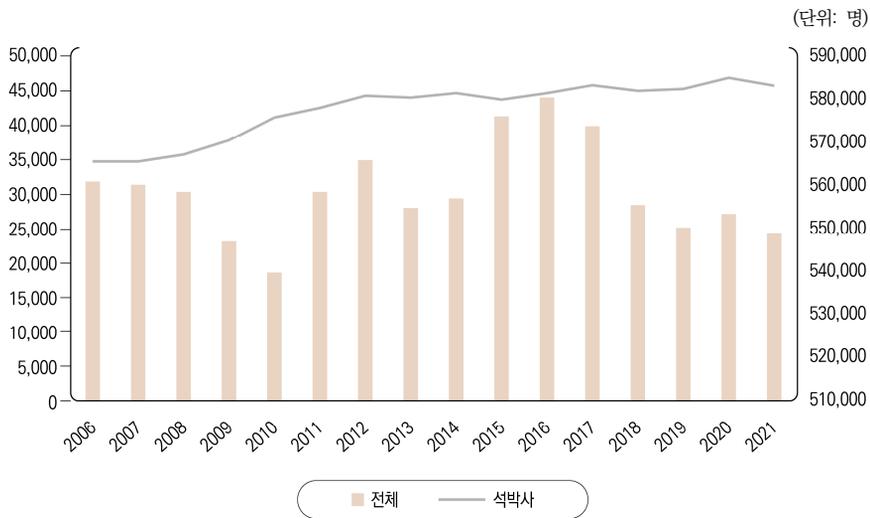
1. 과잉의 고등교육

우리나라의 1980년대 이후 고등교육 팽창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것이었다. 1980년대 이후 고등교육이 팽창하는 가운데 4년제 대학의 학위는 크레덴셜의 효과가 약해졌고 이에 학벌 혹은 석박사 학위를 크레덴셜로 추구하면서 사교육 문제와 학력 과잉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그림 3]은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생 전체와 그중에서 석박사 졸업생의 수적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전체의 수는 2016년을 정점으로 이후 줄어들고 있지만, 석박사 졸업생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석박사 졸업생의 증가는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가 학벌 추구에서 석박사 학력의 추구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전체 졸업생과 석박사 졸업생의 수적 추이



자료: KOSIS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석박사 학력의 추구는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배출한다는 의미에서의 학력 과잉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다음의 <표 1>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업인력 중에서 석박사 학위 인력의 필요는 1%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로는 4.6%나 공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석박사 학력의 과잉 공급은 대졸자의 하향 취업, 그에 이은 전문대졸자의 하향 취업을 야기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고졸자의 하향 취업으로 귀결된다.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학원 졸업자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현재는 산업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5배 가까이 공급되어 있어 과잉 학력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여전하다.

표 1. 산업 인력의 필요 교육 수준 대비 실제 교육 수준의 미스매치

(단위: 명, %)

	필요인력	비중	실제인력	비중
초졸 이하	-	-	2,553,398	10.5
중졸	1,889,649	7.8	2,309,239	9.5
고졸	13,776,410	56.7	9,602,850	39.5
전문대졸	2,575,842	10.6	3,014,053	12.4
대졸	5,821,716	23.9	5,706,389	23.5
석박사	252,901	1.0	1,130,589	4.6
계	24,316,518	100	24,316,51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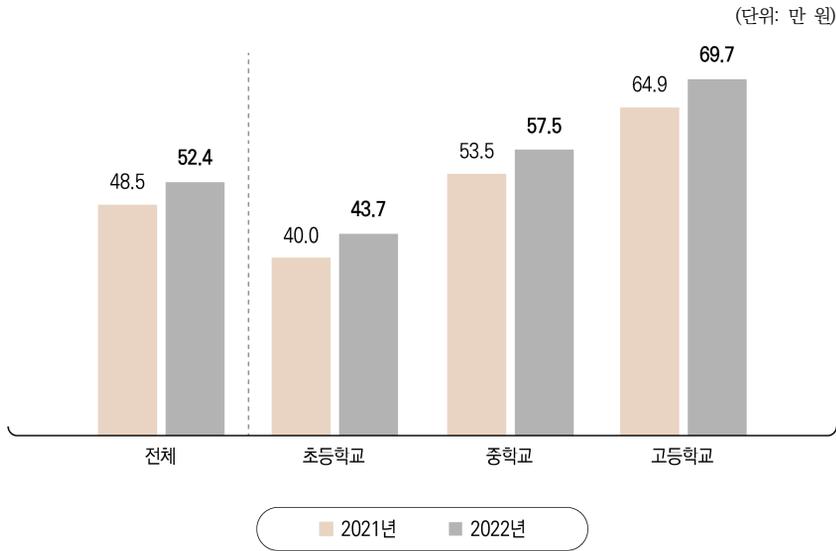
자료: 김안국·유한구(2014). p. 37.

2. 고등교육을 위한 사적 지출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쓰는 교육비는 주로 사교육비로 고등교육 진입을 위한 것이다. 2022년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한 달 쓰는 사교육비는 거의 7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1인당 생계급여의 최대 지원액이 약 62만 원인 것보다도 많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비중이 약 22%가 된다.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소득 수준이 낮아 아예 사교육 자체에 접근할 수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림 4. 월평균 사교육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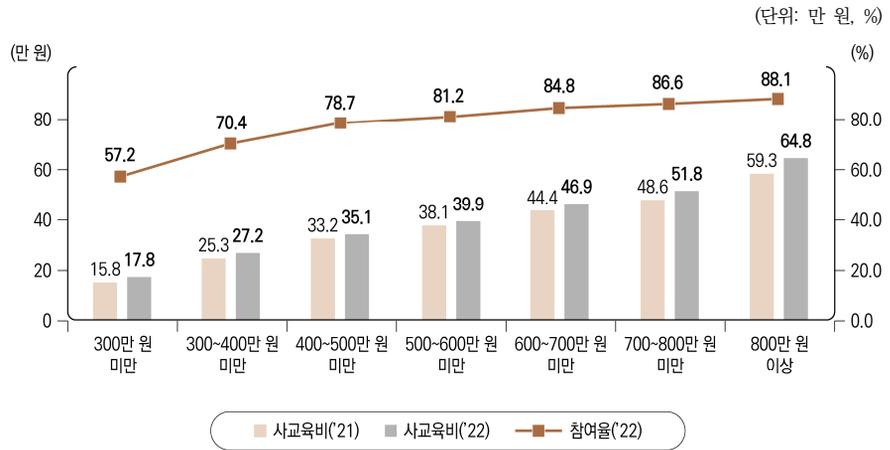
주: 방과 후 학습, EBS 교재비, 여학연수 등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것임.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3. 3. 7.).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 1.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거의 비례하고 있다. 그런데 [그림 5]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교육비와 소득 수준은 거의 정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사교육 참여율은 400만 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에 참여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특징적이다.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소득 가구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57.2%로 8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의 참여율 88.1%에 비해 31%p나 떨어졌다. 그리고 최고 소득 구간의 가구와 최저 소득 구간의 가구가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57만 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사교육 참여에 양극화가 심각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에서 2022년 10분위 소득 1분위(연 소득 897만 원), 2분위(연 소득 1,749만 원), 3분위(연 소득 2,624만 원)에 해당하는 가구는 아예 조사가 되지 않았다. 전체 가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1분위에서 3분위 가구의 사교육 참여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 추론된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참여의 양극화 양상은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림 5. 가구소득 수준별 사교육 참가와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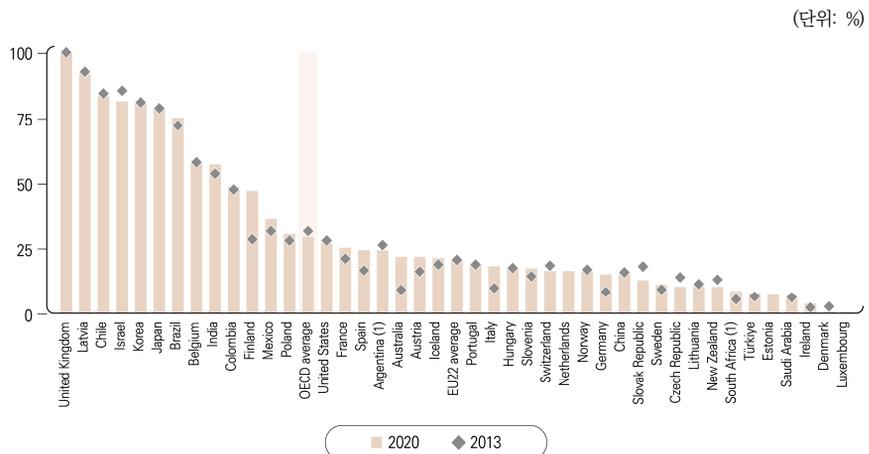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3. 3. 7.).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p. 4.

3. 사적 고등교육 지출의 높은 비중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80%는 사립의 고등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에서 5위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이다. OECD 전체로 보면 사립의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의 평균 비중은 25%를 조금 넘는데, 다수의 국가에서 그 비중은 25% 이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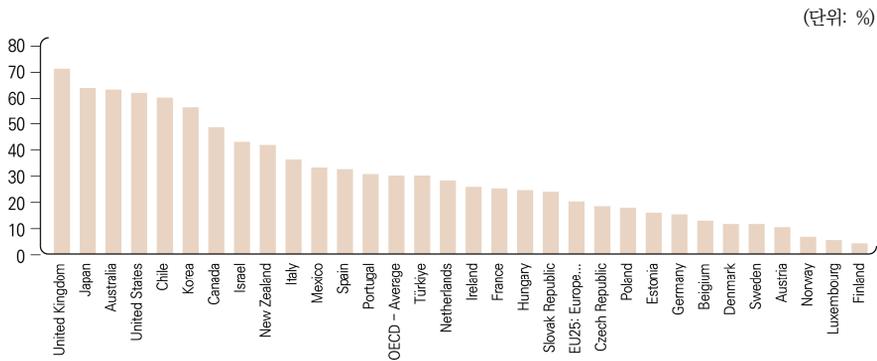
그림 6. 사립의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의 비중



자료: OECD(2022). p. 136.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거의 6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내에서 6위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으로 30% 정도이며, EU 국가는 더 낮아 평균 20%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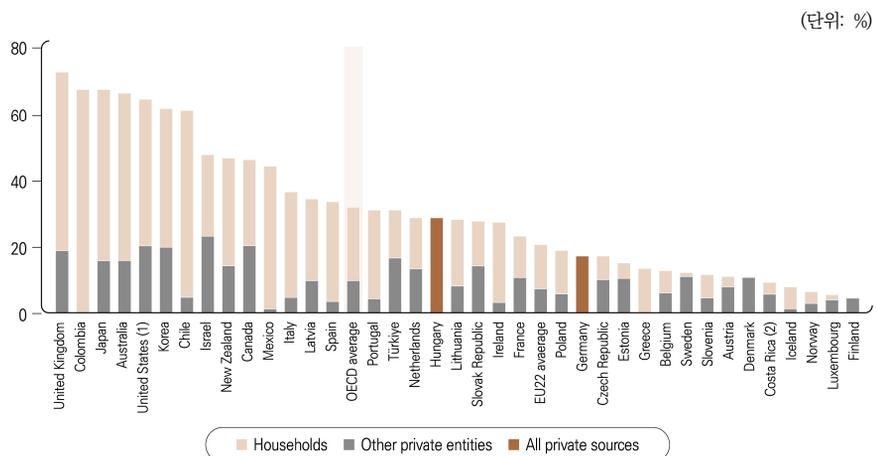
그림 7.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에서 사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2020년)



자료: OECD.Stat 데이터. 필자가 필요 국가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작성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재원은 대부분 가구에서 나온 것이다. 가구가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비용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림 8. 사적 고등교육 지출의 출처(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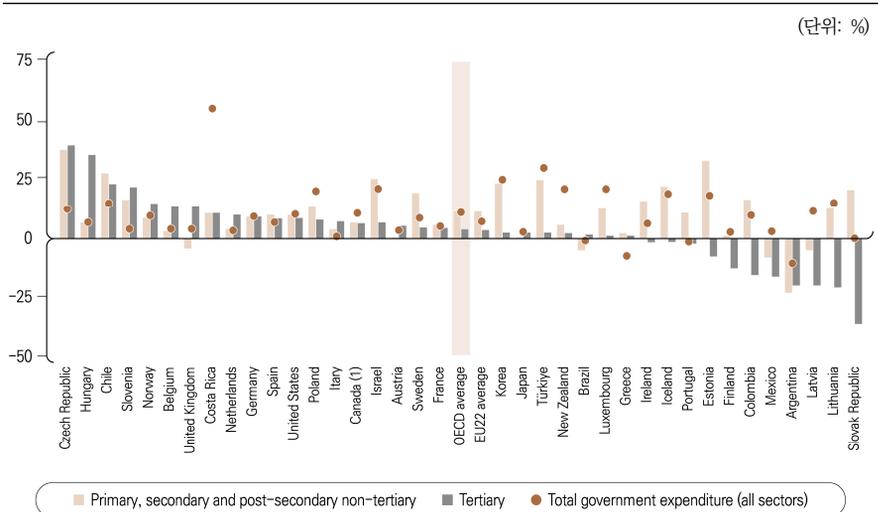


자료: OECD(2022), p. 268.

[그림 9]에 의하면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은 몇 국가를 예외로 하면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간판 국가인 영국과 미국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의 증가가 10% 이상 이루어지고 있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이 늘었지만 그 대부분은 초·중등교육에서 나타난 것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은 5년 동안 3%p 이하로 증가하여 OECD나 EU 국가에 비해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이 더 적게 증가하였다.

그림 9. 공적 교육 지출의 변화(2015~2019)



자료: OECD(2022). p. 284.

III 사적 고등교육 투자와 불평등

1. 자본주의 체제의 구분에 따른 고등교육과 시장의 연계

Hall & Soskice(2001)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업 지배구조와 노사관계, 숙련 형성 기제 등의 기준에 따라 크게 자유시장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제도로서 시장을 조정하는 조정시장경제체제로 구분하였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등이 있다. 조정시장경제체제를 가

진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조정시장경제체제는 숙련형성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교육의 성취를 상대적 수준으로 파악하며,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도 학생의 성적 순위로 결정한다. 교육과 훈련은 일반적 영역의 능력(일반 숙련)을 추구하며, 이에 교육과 직무의 연계가 약하다. 통상 직무에 배치된 이후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무 숙련을 형성한다. 일반적 인적자본의 상대적 성취를 크레덴셜로 추구하며, 이에 교육 수준 자체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크다.

조정시장경제체제에서는 교육 성취를 절대적 수준으로 파악하며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은 학문적 차별화로 인한 기능적 분화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에 직업(직무) 숙련과 관련된 능력을 중시하며 교육훈련과 직무의 연계가 매우 강하다. 조정시장경제체제에서는 직업특수 숙련자격이 직무 진입의 열쇠로 기능하며 교육 수준 자체에 따른 임금 격차는 크지 않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속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적 능력에 대한 선호가 분명하고 교육과 직무의 연계가 불충분하며 교육의 수준 자체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크다. 김안국 외(2017)는 우리나라에 크레덴셜리즘이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이 사적 주체를 중심으로 시장(사적 교육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위재 획득이 개인의 사적인 부에 의해 이루어진 고등교육 크레덴셜에 의해 이루어지고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큰 상태에서 소득의 불평등 양상은 그대로 대물림될 수밖에 없다.

표 2. 고등교육과 시장경제체제 비교

구분	자유시장경제(영국, 미국)	조정시장경제(독일, 네덜란드)
성취의 측정	상대적 최고 수준	절대적 최소 수준
교육시스템	일반적 능력을 목표로 학위와 학점 등 상대적 성취 측정	학문적 차별화로 인한 기능적 분화의 수준이 높음.
고등교육 접근	학생의 성적 순위	기관적 분화로 선택
직업 탐색	일반 영역	특수(niche) 영역
사용자의 채용(직무배치) 기준	일반적 능력(졸업생의 질)	직업 특수 숙련 자격
교육과 직무 연계	약함	강함
직무 필요 숙련 획득	직무배치 이후 교육과 훈련	학교 교육과정에서
노동시장	내부노동시장, 분단노동시장	직업노동시장
보수의 상대 차이	큼(교육 성과와 노동시장 성과 연계)	작음
직무 경합을 위한 시그널링	일반적 인적자본의 상대적 성취	경로 선택과 특수 숙련

자료: 김안국 외(2017). p. 133.

2. 사적인 고등교육 투자와 경제적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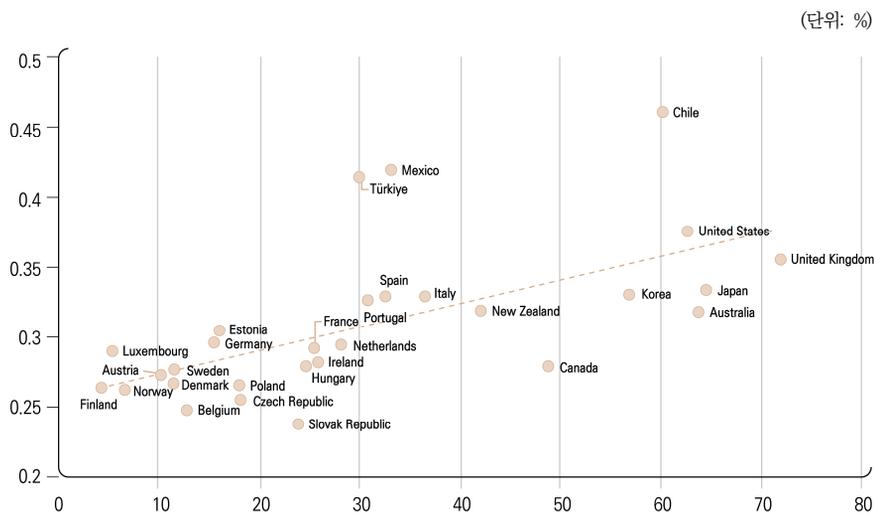
경제적 불평등은 지니계수로 측정된다. 지니계수는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지니계수는 국가 간의 소득 불평등을 비교하는 데 통상적으로 활용된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단순한 교육 소비가 아니라 지위재 획득을 위한 것이기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투자이다. 앞서의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은 곧 사적 투자로 바꿔 말하여도 무방하다.

[그림 10]은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의 비중과 지니계수의 관련성을 보여 준다. 그림에서 종축은 지니계수의 값이며, 횡축은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의 비중이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소득 불평등이 월등하게 높은 칠레나 멕시코,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의 비중과 지니계수는 명확하게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전형적인 국가인 미국, 영국, 일본,

한국, 호주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의 비중이 높으며 동시에 지니계수도 높아 소득 불평등이 심한 것은 이들 국가에서 고등교육이 소득 불평등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0. 고등교육 사적 투자의 비중과 지니계수(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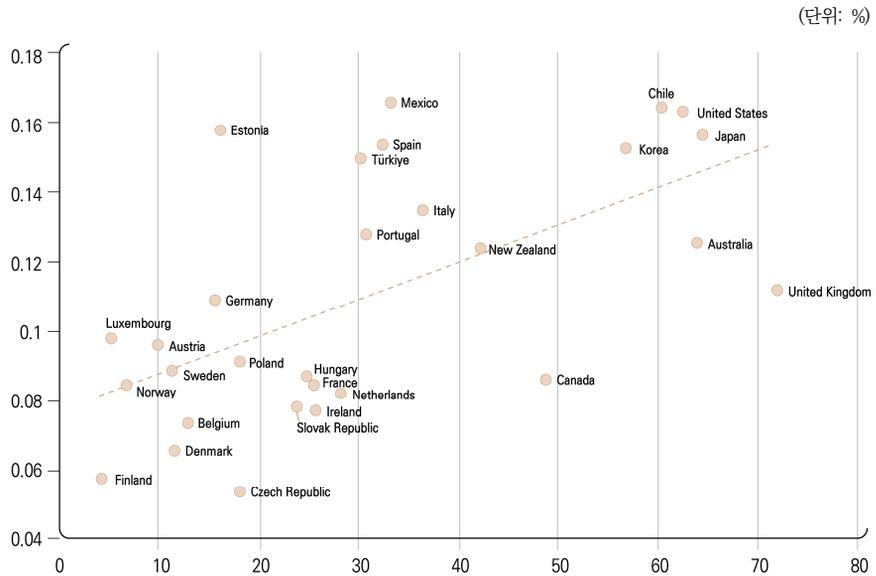


주: 지니계수 중 2020년의 값이 없는 국가들이 있어 이전 연도의 지니계수값으로 대체하였음. 칠레는 2017년, 일본은 2018년, 독일, 프랑스, 덴마크, 튀르키예는 2019년 값임.
 자료: 고등교육 사적 투자의 비중은 OECD.stat에서 가져옴. 지니계수는 KOSIS 국제통계에서 가져옴.

지니계수로 측정된 경제적 불평등은 개인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기 어렵다. 개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을 내고 소득 이전을 받은 뒤 국민소득의 중앙값의 절반에 이르지 못하는 인구의 비중이다.

[그림 11]에서 보면 고등교육 사적 투자의 비중과 각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역시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국가인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영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유럽 국가들의 상대적 빈곤율보다 현저히 높은 것이 관찰된다.

그림 11. 고등교육 사적 투자 비중과 상대적 빈곤율



주: 상대적 빈곤율 중 2020년의 값이 없는 국가들이 있어 이전 연도의 상대적 빈곤율로 대체하였음. 칠레는 2017년, 일본은 2018년, 독일, 프랑스, 덴마크는 2019년 값임.
 자료: 고등교육 사적 투자의 비중은 OECD.stat, 상대적 빈곤율은 KOSIS 국제통계에서 가져옴.

3. 계층 고착화 기제로서의 고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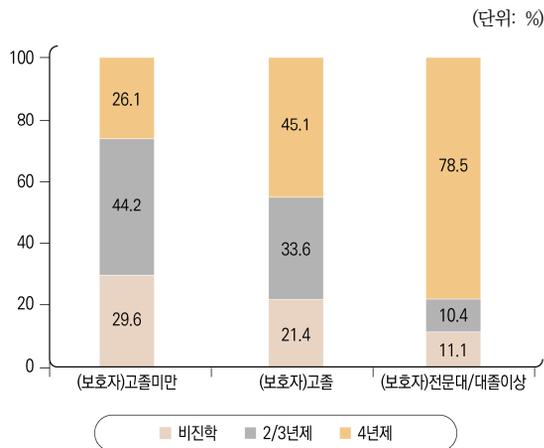
괜찮은 직업이라는 지위재 획득이 고등교육 이수라는 크레덴셜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등교육 이수가 모든 계층에 원활하게 열려 있으면 이는 고등교육 활성화와 계층 이동의 선순환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 이수가 사적·개인적 비용으로 이루어지고,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져 있으면 결국 고등교육 이수는 계층 고착화의 기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고등교육에 진입하기 위한 사교육이 활성화되면 가구의 부에 따른 고등교육 진입이 구조화되기 때문에 고등교육 이수가 계층 고착화의 기제가 되는 것을 강화한다.

한국 사회의 계층 구조가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있음은 민인식·이경희(2017), 이경희(2017)의 연구 등에서 확인되었다. 민인식·이경희(2017)는 특히 부모의 직업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괜찮은 일자리라는 지위재가 세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필선·민인식(2015)의 연구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식의 교육 수준으로 계승되고,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큰 것이 계층 고착화의 원인이라 보고 있다. [그림 12]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로,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른 자녀의 대학교 입학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부모의 직업이 자식에게 대물림된다는 앞서의 연구 결과와 함께 해석하면 지위재인 관창은 일자리의 세습은 고등교육 이수라는 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2. 부모의 교육 수준과 자녀의 대학 진학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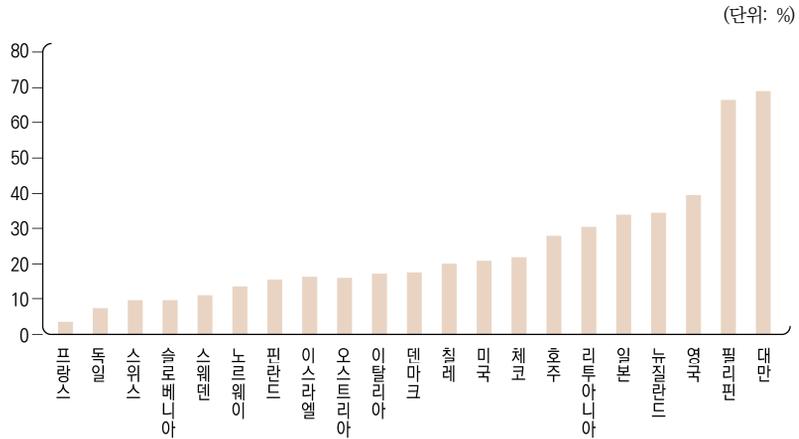
자료: 최필선·민인식(2015). p. 272.

교육 대물림이란 현상은 우리 사회의 고등교육 이수가 크레덴셜화되었고, 크레덴셜을 사적 투자에 의해 취득하고 있는 구조적 현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속하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정당화된다.

[그림 13]은 불평등에 대한 국제조사 중에서 소득이 높은 부모의 자식이 좋은 교육(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정당하기를 묻은 결과이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영국, 뉴질랜드, 일본, 호주, 미국 등의 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 국가에서 소득이 높은 부모의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크다. 소득이 높은 부모는 고등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이는 결국 고등교육의 대물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라 보아 무방하다. 반면에 조정시장경제체제의 유럽 국가에서는 부

모가 고소득인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상당히 적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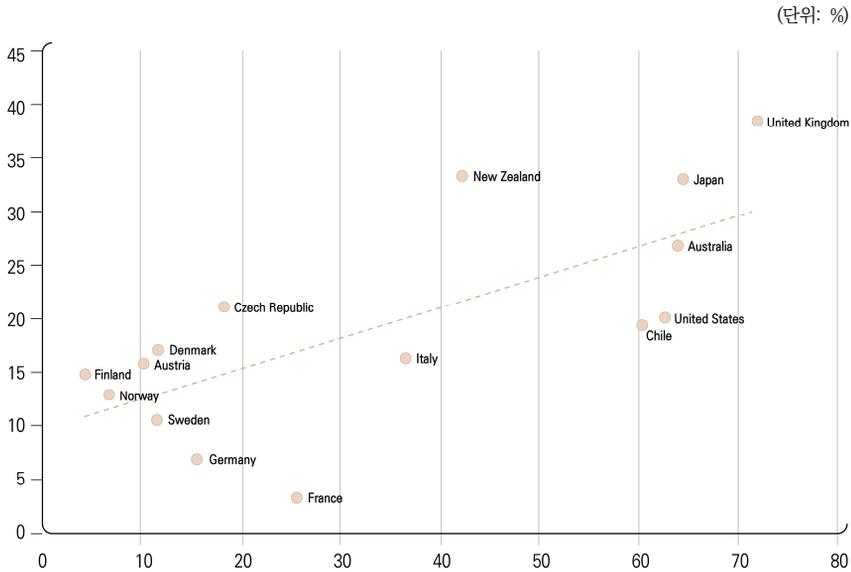
그림 13. 고소득자의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 비중



주: 수치는 '지극히 정당하다' 혹은 '상당히 정당하다'에 응답한 비중을 나타낸 것임.
 자료: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2019 Social Inequality.

[그림 14]는 소득이 높은 부모의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 과 사적인 고등교육 투자의 비중이 정비례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적인 고등교육 투자의 비중이 높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속하는 영국, 일본, 호주, 미국,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소득이 높은 부모가 자식에게 고등교육을 시켜 교육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을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림 14. 고소득자의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 비중과 사적 고등교육투자 비중의 관련성



주: 횡축은 고등교육의 사적 투자 비중. 종축은 고소득자의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 비중.
 자료: 고등교육의 사적 투자 비중은 OECD.Stat, 고소득자의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 비중은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2019 Social Inequality)에서 가져옴.

1. 요약

현대 사회에서 고등교육 이수증은 지위재 획득의 수단으로서 크레덴셜이 되고 개인은 크레덴셜을 갖고자 하며 교육기관이 크레덴셜을 생산하고 이를 개인들이 구매하는 크레덴셜리즘의 구조가 형성되었다. 크레덴셜리즘의 구조에서 고등교육이라는 공공재는 자본주의적 시장관계에 포섭되고 과잉 학력과 사교육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크레덴셜로서의 고등교육이 팽창하였고 이에 4년제 대학교육이라는 고등교육 이수의 크레덴셜 효과가 약해지면서 학벌 추구와 석박사 학위 추구가 사교육 문제와 함께 나타났다. 그 결과 산업에서 요구하는 필요 교육 수준 대비 산업

IV 요약과 제언

인력의 실제 학력 수준의 미스매치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2014년 약 90만 명의 석박사 인력이 과잉인 상태였고 학벌 추구에 따른 사교육비가 증대되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의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 사회는 전체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에서 사적인 지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등교육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80%가 사립의 교육기관에 속해 있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인 지출이 거의 60%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OECD 평균은 30%).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인 지출은 거의 대부분 가구에서 나오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인 지출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정체되어 있다.

고등교육 이수는 조정시장경제체제보다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크레덴셜로 추구하고 있으며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크레덴셜리즘의 구조가 더 강하다.

고등교육에서 사적 지출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더 많고 상대적 빈곤율도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체제 국가의 특색이기도 하며 고등교육은 이들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이 야기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 이수는 계층 고착화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부모의 높은 교육 수준은 높은 소득 수준으로 연결되고, 이는 자식의 높은 교육 수준으로 이어진다. 이에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가 결국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계층 고착화를 낳게 된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체제 국가에서 사람들은 소득이 높은 부모의 자녀가 좋은 교육, 즉 고등교육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비중이 높다. 이는 고등교육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인식을 의미한다. 그러한 고등교육 대물림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인식은 사적인 고등교육 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확연히 높다.

2. 제언

첫째, 공공재로서의 고등교육이라는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이 주로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고 소위 STEM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은 보편적 교육

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공공재로서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의 비중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인 지출이 소득 불평등과 계층 고착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의 확대로 소득 불평등과 계층 고착화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둘째, 고등교육 기회에 대한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이 가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진입에서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일단 고등교육에 진입한 학생이 사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교육과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인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

셋째, 고등교육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 고등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고등교육 이수료 고급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고등교육 이수가 단지 크레덴셜로만 추구되는 구조가 극복될 수 있다. 크레덴셜리즘의 극복으로 고등교육 이수가 소득 불평등과 계층 고착화의 기제로 작용하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3).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교육부 보도자료(2023. 3. 7.).
- 김안국·유한구(2014).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종별 수요 추정 - 직업사전을 활용하여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김안국·장주희·김지영·이상호(2017). 『한국 사회의 학력주의(Credentialism)와 포스트 NCS』.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민인식·이경희(2017). 「직업계층 이동성과 기회불균등 분석」. 『노동리뷰』 2017년 7월호. pp. 63-74.
- 이경희(2017). 「소득계층 이동성 실태와 동적 변화」. 『노동리뷰』 2017년 6월호. pp. 77-91.
- 최필선·민인식(2015). 「한국의 세대 간 사회계층 이동성에 관한 연구」. 『제10회 한국교육고용패널학술대회 논문집』. pp. 259-283.
- Bills, D. B.(2016). "Congested Credentials: The Material and Positional Economics of Schooling,"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vol. 43, pp. 65-70.
- Brown, D. K.(2001). "The Social Sources of Educational Credentialism: Status Cultures, Labor Markets, and Organizations," *Sociology of Education*, vol. 74, Extra Issue: Current of Thought: Sociology of Education at the Dawn of the 21th Century, pp. 19-34.
- Hall, P. A. and Soskice, D. eds.(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irsh, F.(1976). *Social Limits to Growth*, Cambridge, M. A.: Harvard University Press.
- OECD(2022). *Education at a Glance 2022*. OECD.
- OECD.Stat.
- KOSIS.
-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2019 Social Inequality.

KRIVET